

한 화 진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부원장

미국 UCLA 이학박사(대기화학)

KEI 선임연구위원·지구환경연구센터장·정책연구본부장,

대통령자문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기후변화전문위원,

한국물포럼 이사, 청와대 대통령실 환경비서관 등 역임

tel. 02-380-7710 | wjhan@kei.re.kr

녹색성장전략의 내실 있는 실천이 환경정책의 성공을 이끈다

21세기 녹색성장시대, 확고한 자리매김

2010년은 우리 정부의 녹색성장 비전 선포 3년차를 맞이하여 국내·외적으로 녹색성장이 21세기 신성장 개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한해였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질적이고 균형있는 성장으로의 전환과 환경정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환경·경제의 상생 발전모델이 UNEP, OECD 등 국제사회로부터 녹색성장의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이로써 4대강살리기 사업, 폐자원에너지사업, 녹색도시 조성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통한 신규 환경시장 창출이 더욱 힘을 받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는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G20 세계정상회의에서 기업의 참여하에 녹색성장 권고사항이 정상선언문에 채택됨으로써 녹색성장이 향후 국제질서를 드라이브할 전기가 공공해졌다. 특히 12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16)에서 저탄소사회, 경제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저탄소개발의 녹색성장전략 개념이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비전에 도입되었다. 따라서 각 국가마다 전략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환경정책을 경제, 산업 및 사회정책의 시각과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추진방향과 큰 틀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의 내실 있는 실행

국제사회에서는 2012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협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COP16 칸쿤회의에서는 부속서 I 국가들의 2차 의무감축공약기간에 대한 감축목표량 설정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2011년 남아공에서 포스트교토 기후체제에 대한 최종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이 보다 증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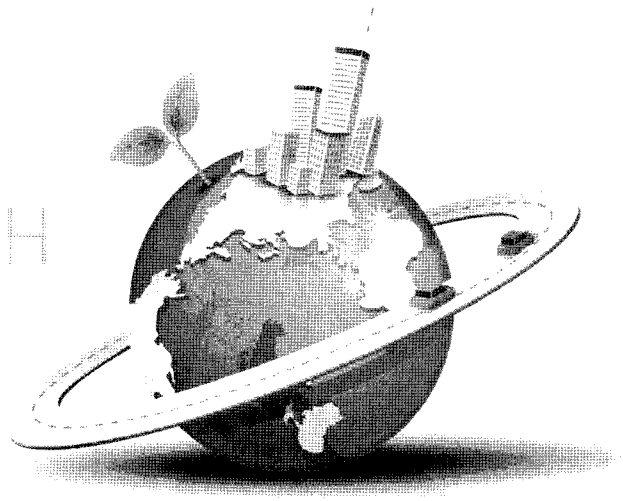
국내 환경정책은 현재의 녹색성장패러다임을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제도 정비와 실천적 과제 이행의 내실화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대외적으로도 세계



경제 여건에 따라 급격한 환경규제나 국제협약이 입안되거나 집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에너지, 물, 식량, 생물 등 환경, 자원위기에 대한 녹색경쟁은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EU, 일본, 중국 등은 환경, 자원을 매개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찾는데 더욱 매진할 것으로 녹색산업의 근간이 될 원천 녹색기술 개발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2011년에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에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수단 이행 등의 노력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는 우리 기업과 경제, 사회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도전과제이다. 부문별, 업종별 감축 설정작업이 마무리되고 산업업종, 건물, 교통 등 부문별로 달성해야 하는 감축목표와 에너지 효율적인 기반 구축 등 구체적인 액션플랜이

마련될 것이다. 목표관리운영지침 제정안 입법을 통해 약 470개 지정된 업체의 목표설정 및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 산정·보고·검증(MRV)의 구체적 세부기준이 이행될 것이다. 아울러 배출권 거래제 입법, 친환경적 조세체계 도입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시장기반의 논의와 준비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면서 비용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효과를 높인다는 녹색성장의 개념에 잘 부합하는 정책수단이며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성패가 달려있다. 법안 제정을 통해 산업계에 적절하고 일관된 정책적 시그널(녹색시그널)을 줌으로써 기업들이 배출감축 기술개발에 매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배출권거래제 설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문적인 세부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GREEN GROWTH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자원의 가치와 효율적 이용에 대한 인식 증대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과 함께 기후변화의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기상재해의 피해가 자국의 큰 경제적 손실로 나타나면서 사회적 인프라 확충과 재난의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인프라 보강의 요구가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2~3℃ 기온상승으로 인해 전 지구 생물종의 20~30%가 멸종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는 식량, 물, 에너지, 생물자원 등에 영향을 주고 이는 자연자원을 매개로 하는 1차 산업의

향방에 영향을 준다. 1차 산업은 곧 2차, 3차, 서비스 산업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는데 결국 기후변화의 영향을 기존 산업형태와 사회시스템의 변화 및 새로운 산업 창출의 기회로 이어진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의 환경, 경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8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2010년에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자원, 생태, 농업, 사회기반시설 등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하기 위한 본격작업이 분야별로 이루어질 것이다. 2010년 UN이 정한 ‘생물다

양성의 해를 통해 국내도 생물자원의 가치와 효율적 이용의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자원의 변화가 미칠 파장에 대한 중요성 및 인식은 상당히 부족하다. 제주도에서 개최될 2012년 세계 자연보전총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2011년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자연, 생물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방안 마련에 노력을 가해야 하며 실질적인 기후변화 적응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야말로 기후변화 적응의 대표적인 통합대책이다. 수자원 확보, 홍수·가뭄방지, 수질개선, 수변지역 생태계 복원 등의 다목적 사업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성장의 효과적인 핵심 실천적 성과로 기대된다.

21세기는 분명 기후변화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질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는 녹색성장 시대이다. 이제는 유사한 전략적 비전에 대해 실질적인 성과를 누가 먼저 만들어 내어 미래 녹색성장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점, 리드하느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OECD에서는 30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녹색성장전략 보고서를 2011년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국제사회에 녹색성장전략을 처음 발의한 선도국인 우리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하나의 정책(기술)수단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책 수단간 조화가 필수적이며, 정책수단간 조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협력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 통합대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마련하여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국가이면서 국제사회를 리드할 녹색성장 실천 국가로 자리매김할지를 관련 분야 모두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 고민해야 한다. 녹색성장전략의 실천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하여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환경과 경제의 상생, 녹색성장의 실천이 바로 공정사회 실현의 초석이 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21세기 녹색성장시대에 새로운 환경수요를 찾아내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분야에 계신 분들의 앞서가는 마인드 전환과 역할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해 본다.

